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민주적’ 대안인가: ‘무세계적’인 자들의 민주주의?*

김 만 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열기 속에 국내외 진보정치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간 핵심 논쟁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집단에 민주적 규범을 부여할 수 있느냐’란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진보세력이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이 동원된 집단에 규범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점검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좌파 포퓰리즘’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좌파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 현실에도 정당하고 효율적인 전략인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파 포퓰리즘이, 한나 아렌트의 용어를 빌자면, ‘무세계적’(worldless)인 자들의 민주주의로 전략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주제어 :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 상탈 무폐, 을의 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1. 좌파들의 기회로서 포퓰리즘의 국면?

2010년대 들어 포퓰리즘 운동이 세계 각지에서 부상하고 전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샹탈 무페(Chantal Mouffe)와 같은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국면(혹은 계기)’(populist moment)이라고 부르며 이를 좌파들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좌파 포퓰리즘’이라 명명된 이 전략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권 대의제 민주주의를 소생시키자는 희망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아래 무기력해진 진보적 좌파들이 활력을 되찾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또 다른 희망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의 병리학적 현상’으로 여겨지던 포퓰리즘이 마치 신자유주의 아래 신음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좌파를 동시에 되살릴 수 있는 묘약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키아벨리를 본받아 ‘국면 안에서’(in the conjuncture)¹⁾ 전략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중심에 두고 ‘계급’을 넘어서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의 접합을 통해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에 맞서고자 한다. 이런 의도 아래서 ‘좌파 포퓰리즘’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키아벨리주의자들의 욕망이 반영된 용어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는 도덕주의적 마키아벨리주의자

1) Chantal Mouffe,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2018), p. 9. 우리말로 많은 이들이 “conjuncture”를 ‘국면’이라는 용어로 옮기고 있으나 좀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논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무페 역시 언급하고 있는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의 설명은 이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알튀세에 따르면, ‘마키아벨리가 국면 속에서 사고한다’고 했을 때 이는 “[다루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결정요인들, 모든 존재하는 구체적 주변상황들을 고려하고, 이 요인들과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나누고 비교하는 목록을 만드는 것... 그 사건이 이야기하고 부여하는 문제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ouis Althusser, *Machiavelli and US* (London: Verso, 1999), pp. 17-18을 보라.

들의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이론적으로, 더불어 실천적으로 얼마나 정당하고도 유효한 것일까? 그리고 이런 전망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들 사이에도 퍼져나고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정당하고도 유효한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데,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변화가 없는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201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이들이 변화를 원하는 국면, 더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과 그 결정을 실현하는 실제적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³⁾ 이런 맥락에서 ‘좌파’ 포퓰리즘이 효과적인 전략인지, 더 나아가 정당한 전략인지를 다음의 순서로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 ‘좌파’ 포퓰리즘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무페가 인용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표현을 빌자면) ‘국면 안에서’ ‘좌파’ 포퓰리즘의 적절성을 살피기 위해 우리사회 현실의 맥락에서 정당하고도 효율적인 전략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런 논의를 거쳐 결론에서 좌파 포퓰리즘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용어를 빌자면, ‘무세계적’(worldless)인 자들의 민주주의로 전략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2) 샬탈 무페와 어네스토 라클라우가 진보정치의 미래를 논의하며 포퓰리즘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이 주장은 국내외 진보정치세력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무페가 스페인 정당 포데모스(Podemos)와 결합하며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이란 용어를 제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문 혹은 대답집이 나왔다. (금민, 「포데모스,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 (2015): 268-313와 샬탈 무페, 히로세 준, 「포데모스 혹은 좌파포퓰리즘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진보평론』 68호 (2016): 127-138 등이 있다.) 특히 무페의 *For a Left Populism*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후(샬탈 무페, 이승원 역,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서울: 문학세계사, 2019) 좌파 포퓰리즘이 다양한 언론매체, 학술지, 발표문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중에서도 장석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시민과 세계』 (통권 34호, 2019)는 좌파 포퓰리즘을 정치적 전략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를 가장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해서 정치의 구성행위를 강조한 Sheldon, S. Wolin, “Fugitive Democracy,” *Constellation* (Vol. 1, No. 1) (1994): 11-25를 보라.

II. ‘좌파’ 포퓰리즘의 이론적 내용

제II절에선 논의의 첫 단계로서 ‘좌파’ 포퓰리즘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 보려 한다. 그 어떤 정치이론도 정당성의 기반이 없다면 이론으로서 정립될 수 없기에 이론적 내용은 정당성의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간 논쟁이 결국 ‘자발적으로 동원된 집단에 민주적 규범을 부여할 수 있는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만큼, ‘좌파 포퓰리즘’ 이론이 동원된 집단에 규범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점검해 볼 것이다.⁴⁾ 이를 위해 다음 세 항목을 점검해보려 한다. 첫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물려는 포퓰리즘 이론가들의 시도. 둘째, ‘적’과 ‘동지’에서 ‘우리’와 ‘그들’이란 구분으로의 전환. 셋째, (죽은 자의 이름이라도) 지도자가 필요한 포퓰리즘.

1.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경계 허물기

이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좌파’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이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에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샬탈 무페가 대표적이다. 라클라우는 사회주의가 ‘계급갈등에 기반을 둔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거부한다. 더 나아가 포퓰리즘이 인종차별적이며, 이민 배척적이며, 프로토 파시즘에 가까운 극우들의 이데올로기라는 관점도 부정한다.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이란 하나의 정치적 논리(political logic)으로서 좌파, 우파, 중도 모두가 쓸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담론의 형식이다.

4) 이와 관련해선 Andreas Kalyvas,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the Extraordin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의 서문 및 Margaret Canovan, *The People* (London: Polity, 2005)의 1장을 보라. 플라톤부터 볼 수 있듯이 ‘인민’(people)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동원된 집단에 규범을 불어넣는 일이다.

포퓰리즘은 ‘권력자들’(those in power)에게 맞서 ‘언더독들’(underdogs)을 동원하기 위한 담론 전략일 뿐 계급이나 지향하는 사회의 모델 같은 것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⁵⁾ 라클라우에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전통적인 좌파가 실패해 온 이유다. 페론의 포퓰리즘에 빠져있던 라클라우의 관점에서 포퓰리즘이 계급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요소에 매여 있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⁶⁾ 이런 관점은 지적 동반자인 무페에게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특히 라클라우에게) 지향점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세계에서 ‘언더독의 동원’과 ‘권력을 쥔 자들’ 사이의 ‘맞섬’(confrontation)이다. 이런 갈등 없이 전복이 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맞섬과 전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이들에게 일관적인 이념적, 계급적 지향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향은 현실적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존 주디스(John B. Judis)가 지적하듯이, 미국의 티파티는 애초에 자유주의자들이었다. 1988년 청년들이 주도하며 만들어진 헝가리 정당 ‘피데스’(Fidesz, 헝가리 시민동맹)는 진보정당이었지만 몇 차례 선

5) Ernesto Laclau, *On Populist Reason* (Verso, 2005). 무페 역시 *For a left Populism*에서 라클라우의 프로젝트를 똑같이 밝히고 있다. Mouffe, *Ibid*, pp. 10-11. 관련하여 우리말 번역서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는 ‘underdogs’를 ‘패배자들’로 옮겨 놓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어에 동의하지 않는데, ‘underdogs’는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이르는 말이지 패배자를 이르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그러한데, 포데모스에 관한 논문에서 루이스 라미로와 라울 고메즈는 급진적 좌파 포퓰리스트로서 포데모스 지지자들은 ‘지구화’와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패배자들이란 관습적 묘사와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Luis Ramiro & Raul Gomez, “Radical-Left Populism during the Great Recession: Podemos and Its Competition with the Established Radical Left.” *Political Studies*. Vol. 65(1S) (2017), p. 108을 보라. 이 논문에서는 ‘underdogs’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 용어를 찾지 못해 ‘언더독’이라는 영어 표현 그대로 옮긴다. 언더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에 그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영어 표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John B. Judis, “Rethinking Populism,” *Dissent* (Fall, 2016)을 보라. (<https://www.dissentmagazine.org/article/rethinking-populism-laclau-mouffe-podemos>)

거를 승리해 나가는 가운데 국수주의적 보수정당으로 탈바꿈 했다.⁷⁾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좌우의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결국 민주주의는 많은 쪽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게임이 되어버린다. 현재 유럽 여러 국가에서 목격 하듯이 우파 포퓰리스트들도 좌파들처럼 복지를 옹호할 수 있다.⁸⁾ 그런데 그 복지의 토양이 타자의 혐오라면,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 불러야 할까? 우리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더 도덕적인가라는 질문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정체성’ 그 자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적들’이 아닌 ‘그들’이라고?

무페는 이런 ‘맞섬과 전복의 정치’를 갈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모델’로 바꾸려 시도한다. 소위 ‘논쟁적(경합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 모델이다. 나아가 이런 ‘갈등’ 모델이야말로 좌파들이 추구하는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이성 중심적 메타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합의지향형 민주주의 이론이다. 존 롤스(John Rawls)가, 유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이론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변화가 갈등에서 온다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런 갈등지향형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무페가 소환하는 이가, (너무나 아쉽게도) 나치의 법철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이란 ‘적(enemy)과 동지(friend)의 구분’이란 명쾌한 정의를 설파했다. 무페는 슈미트를 불러들이며 그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놓인 갈등을 지적하는 부분이 옳았으며, 민주주의 모

7) Judis, 앞의 글.

8) 로버트 페이지, “유럽의 포퓰리즘과 사회복지” 「한겨레」 (2019. 7.18).

텔에 갈등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⁹⁾

하지만 무엇이 그리 위험해 보였던 것일까? 갈등을 통한 전복을 설파 하던 무페는 슈미트를 소환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갈등의 모델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 아닌, ‘우리(us)와 그들(them)의 구분’에 근거해 있다고 강조한다. 슈미트 식의 ‘적과 동지의 구분’을 ‘적대주의’(antagonism)라 부르는 반면, 자신의 ‘우리와 그들의 구분’은 ‘논쟁주의’(agonism)라 부르며 양자를 선명히 구분한 것이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과제가 ‘적대주의’를 ‘논쟁주의’로 바꾸어놓는 것이라 힘주어 말한다.¹⁰⁾

이런 구분은 포퓰리즘을 하나의 정치적 담론의 형식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입장, 그리고 정치를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맞닿아 있다. 헤게모니 전략을 추구하는 무페의 입장에서 보자면 슈미트 식의 갈등으로 이해하는 정치모델이 필요하긴 하나 적과 동지의 싸움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물리적 내전 혹은 극단적 파시즘으로의 전략이란 파괴적 가능성은 배제하려 했던 것이다.¹¹⁾ 관련하여 슈미트가 다원주의적 조건을 ‘자기파괴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무페는 ‘강력한 다원주의’를 원한다. 강력한 다원주의를 통해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수록 기존의 지배세력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도 어느 정도 제한된 측면을 가진다는 롤스의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fact of reasonable pluralism) 개념을 격렬히 공격하면서 롤스가 배척하려 했던 ‘다원주의 사실 그 자체’(the fact of pluralism as such) 개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다.¹²⁾ 하지만 무페

9) Chantal Mouffe,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1993)의 전체적인 주제다.

10) Chantal Mouffe, *On the Political* (Routledge, 2005)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We could say that the task of democracy is to transform antagonism into agonism.” (p. 20).

11) 이 가능성에 대해선 Carl Schmitt, *The Leviathan in the State Theory of Thomas Hobbes: Meaning and Failure of a Political Symb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31을 참조하라.

12) Mouffe, *The Democratic Paradox* (Verso, 2000) p. 25.

도 인지하고 있듯이 갈등모델에서 강력한 다원주의는 적대주의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무페가 설치해 놓은 안전장치가 이런 치열한 다원적 경합이 자유주의적인 민주적 정치기구들(liberal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즉 일종의 제도화된 공간(institutionalized spaces)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¹³⁾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수많은 가치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급진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기구에 기생하는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를 보고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냉소한다. 도대체 어디가 급진적인 것이냐고, 오히려 무페가 내세우는 급진적 민주주의란 것이 현상유지에 급급한 게 아니냐고 말이다.¹⁴⁾

무엇보다 무페의 이론은 두 가지 논쟁적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사항은 다음 질문과 연계되어 있다. “‘적대주의’와 ‘논쟁주의’를 가르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과 ‘적과 동지의 구분’이란 경계가 선명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무페의 논쟁적 민주주의는 일종의 비합리성(irrationality)을 전제로 성립한다. 무페의 주장처럼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고 나아가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비합리적 행위자들이,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란 경계를 유지하며 자유주의적 제도 기구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일관적으로 행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 비합리적 갈등은 오히려 갈등하는 세력 간에 모욕감이나 열등감, 지속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요구에 대한 좌절감이 파괴적 효과를 낸다고 상정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정치화된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자유를 행사하기 보다는 경멸하는 경향을 보이며... ‘비난과 원한의 정치’로 전략”할 수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¹⁵⁾ 무페는 무엇보다 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13) Mouffe, *On the Political*, p. 32.

14) Slavoj Žižek, “Against the Populist Temptation,” in *Critical Inquiry* (vol. 32. no.3, Spring 2006), pp. 558-559

15) Wendy Brown, “Wounded Attachments,” *Political Theory* 21, no. 3 (August 1993),

않고 있다. ‘원한의 정치’로 가는 길에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헤게모니 투쟁, 즉 담론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둘째, 롤스가 강조하듯 ‘다원주의의 사실 그 자체’란 사회적 조건 하에서는 행위자들 간에 접합점이 되어 줄 공통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¹⁶⁾ ‘다원주의의 사실 그 자체’란 사회적 조건은 사실상 많은 이들에게 자기 신념이 타자와 타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권력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소비니스트들과 페미니스트들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헤게모니적 레토릭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예를 훨씬 덜 극단적인 것으로 들어보자. 열성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고소득층 페미니스트(인정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된 이들)와 의욕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남성노동자(분배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된 이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헤게모니적 공감대가 있을까?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과 접합점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정치는 다양한 요구 가운데 우선성을 결정하는 일을 통해 이뤄진다. 자기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다원주의의 사실에선 누구도 다른 집단에게 자기 요구를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 무폐의 바람과는 달리 ‘다원주의의 사실 그 자체’란 사회적 조건 아래서 갈등을 통해 접점을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롤스에 따르면, 이런 접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무폐가 강조하는) ‘자유적 기구들 내’에서 인간 이성이 작동한 장기적 결과물인 ‘합당한 다원주의의 조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¹⁷⁾

3. 지도자가 필요한 사람들

계급에 대한 애착도, 이데올로기적 지향도 없는 사람들의 정치세계는 결국 ‘권력을 쥐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p. 390.

16)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P, 1993), pp. 36-37.

17) Rawls, *ibid*, pp. 55, 129, 135, 144.

이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을 쥔 자들’에 맞선 ‘그렇지 못한 자들의 동원’이다. ‘이성’이 합의 모델의 중심이라면, 결국 갈등 모델의 중심은 인간의 ‘감성’이다. 이성적이지 못한 자들을 분노를 통해 단기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합리적 모델에 반대하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조직화해 장기적으로 ‘결속력’을 유지하며 헤게모니 투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무폐처럼 ‘다원주의의 사실 그 자체’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적 조건이라면 ‘결속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분열된 자들에게 이런 결속력은, 라클라우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초월적인 특이점의 순간’(transcendent, singular moment)에나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무폐나 라클라우처럼 비합리적 모델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에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장기적 동원에 가담할 수 있는 원천을 확보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라클라우는 포퓰리즘 운동에선 동원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극단적인 형태의 특이점(singularity)은 개인성(an individuality)이다...등가적 논리는...집단의 결속력과 지도자의 이름 사이의 동일시에 이르게 된다.”¹⁸⁾ 다시 말해 지도자의 존재가 지속적인 결속력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겔 바티(Miguel Vatter)가 지적한 대로, 라클라우의 포퓰리즘은 지도자의 이름으로 구현된 “레닌-주의, 마오-주의, 페론-주의 등”의 형식으로 존재할 뿐이다.¹⁹⁾ 페론을 지켜보았고, 그에 매료되었던 이로서 이런 요구는 당연한 요소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론적 구성으로 인해 아주 새로워 보이던 라클라우와 무폐의 포퓰리즘 이론은 기존의 포퓰리즘 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18) Laclau, *On the Populist Reason*, p. 100.

19) Miguel Vatter, “The Quarrel between Populism and Republicanism: Machiavelli and the Antinomies of Plebeian Politics,”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11, no. 3 2012), p. 247. 진태원 역시 『을의 민주주의』(서울: 그린비, 2018)에서 바티를 그대로 인용해 라클라우를 비판하고 있다(85쪽).

‘포퓰리즘 운동이란 그 운동을 이끄는 정치지도자가 사라지면 같이 소멸된다.’²⁰⁾ 이런 결론은 포퓰리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의 주체라기보다는 결국 지도자에 의해 동원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좌파 포퓰리즘이 라클라우나 무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 이론이 포퓰리즘 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명시적으로(라클라우) 혹은 암묵적으로(무페) 수동적 존재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엘리트가 빼앗아 간 권력을 찾아 오자’는 이 운동의 또 다른 본질이 ‘또 다른 엘리트주의’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이 정치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운동을 이끄는 자들의 입이고, 때로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듯이 ‘실제 정치세계에서 사라진 자들의 유언’이다. 라클라우 역시 사라진 자들의 유언이 가진 힘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 세계를 떠난 자는 지금에 맞는 조언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도 우리가 포퓰리즘을 정치의 탈출구로, 한편으로 좌파들의 탈출구로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III. 포퓰리즘의 현실

제Ⅱ절에선 이론으로서의 정당성 부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Ⅲ절에선 다음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좌파 포퓰리즘’ 전략의 현실적 유효성을 살펴본다. 첫째, 압도적인 우파 포퓰리즘의 현실. 둘째, 헤게모니 전파 수단인 미디어를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력이

20) Margaret Canovan, *The People* (London: Polity, 2005), pp. 74-78. 캐노반은 이런 포퓰리즘 운동의 경향을 자유민정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포퓰리즘’과 ‘정치꾼들의 포퓰리즘’을 분석해 이끌어낸다.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1. 압도적 우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을 선제적으로 형성하자!’ 보기에 따라 바람직한 전략이다. 유럽에선 실제로 이런 전략이 먹혀든 것처럼 보였다. 유럽연합이라는 배경, 타이밍이 좋았던 선거 및 스페인의 선거제도 등 여러 맥락이 동시에 잘 작동하며 온 좋게도 라클라우와 무페는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비록 제1당은 아니지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스페인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데모스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은 성공적인 모델로 보인다. 비록 실패로 판명 나고 있긴 해도 그리스의 ‘시리자’(Syriza)도 그리 나쁘지 않은 사례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상황은 전혀 달리 보인다. 2018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28개국 중 22개 국가에서 포퓰리즘을 표방한 국가들이 승리하거나 약진했다.²¹⁾ 이탈리아·그리스·체코·헝가리·폴란드에선 심지어 권력을 잡았고, 16개국에선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월엔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비준하며 영국이 유럽연합과 결별했다. 이 브렉시트 역시 ‘극우 포퓰리즘’의 결과였다. 문제는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억지스럽게 넣을 수도 있는) 그리스의 시리자 사례를 제외한다면 지금은 ‘우파 포퓰리즘’의 시대라는 점이다. 트럼프와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디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포퓰리즘은 인종차별적이며, 이민 배척적이며, 프로토 파시즘에 가까운 극우들의 이데올로기라는 원래의 얼굴로 회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우려할만한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간 경계의 불명확함이다. 2018년 유럽의 반대편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며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이르

21) 강병익, “2017-2018년 4월 유럽연합 국가별 총선결과: 우파강세 및 포퓰리즘 확산, 그리고 유럽연합의 미래” (민주연구원, 2018. 4).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는 아이러니하게도 휴고 차베스의 신봉자였다.²²⁾ 심지어 이탈리아에선 오성 운동이 우파와 좌파를 오가며 극우 및 좌파 포퓰리즘이란 두 극단 형태가 혼란스럽게 혼재하고 있다.²³⁾ 이처럼 포퓰리즘의 세계에서 좌파와 우파의 경계는 선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다면, 룰라에서 보우소나루로 돌아선 브라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좌파 포퓰리즘이 실패한 자리엔 우파 포퓰리즘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깊이 숙고해보는다면 이 점이야말로 좌파 포퓰리즘 전략이 맞고 있는 최대 난관임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 좌파도, 우파도, 중도도 쓸 수 있는 정치담론의 형식에 불과하다면, 좌파 포퓰리즘은 결국 우파 포퓰리즘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다.

2. 대규모 자본의 미디어 독점: 대항 헤게모니 형성이 가능할까?

라클라우와 무페가 주장하는 포퓰리즘 전략의 핵심은 사실상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의 형성이다. 이 대항헤게모니가 맞섬과 전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헤게모니로서 이데올로기’의 힘은 일반적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관련 집단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서 나온다.²⁴⁾ 이 자발적 동의가 헤게모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당대 사회에서 이런 자발적 동의를 만드는 장치는 모두가 알다시피 ‘매스미디어’다. ‘자발적 동의’가 결국 주도적인 여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헤게모니를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2) Tom Phillips and Dom Phillips, “The new Venezuela? Brazil populist Bolsonaro’s scare tactic gains traction,” in *Guardian* (2018. 10. 11).

23) 조일준, “이탈리아, 새 연정 구성…극우 포퓰리즘 털고 친EU 좌회전,” 「한겨레」 (2019. 9. 15).

24) Antonio Gramsci, *Selection from Prison Notebooks*, ed. & trans by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 Smith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pp. 248-249.

그러나 세계 곳곳의 현실은 이런 미디어를,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맞서고자 하는 거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소셜 미디어의 힘과 검색 엔진 등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파급효과 등을 내세우곤 한다. 실제 아랍의 봄 등에서 목격한 소셜 미디어의 힘은 놀라운 것이었으며 검색 엔진의 발전은 정보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전파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디지털’ 미디어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가 ‘독점’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독점의 성향이 거대자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포브스가 매년 내 놓고 있는 세계 부자의 명단에서 2020년 기준으로 상위 20위 내의 절반 이상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디지털 정보기술을 지닌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이들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대선에서 페이스북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짜 뉴스들을 사실상 방치했고 이것이 트럼프의 당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이에 대해 일말의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마크 주크버그가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했다’는 가짜 광고를 페이스북에 실어 조롱한 이유이기도 하다.²⁶⁾ 이후 트럼프는 트위터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활용하며 탈진실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²⁷⁾

무엇보다 대항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더 독점적인 산업이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25) <https://www.forbes.com/billionaires/>을 보라.

26) “Elizabeth Warren Targets Facebook’s Ad Policy With a Fake Ad Claiming Mark Zuckerberg Endorsed Trump’s Re-Election” *Time* (10. 12. 2019)

27) Jason Hannan, “Trolling ourselves to death? Social media and post-truth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s* (vol. 33(2), 2018)을 보라.

산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²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및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면 아쉽게도 대개의 경우 그 변화가 자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자본은 현재 지구적 시장의 논리에 가장 충실하게 디지털 ‘알고리즘’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고, 이윤이 남는 한 탈진실 정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탈진실 정치는, 제이슨 헨넨(Jason Hannan)이 지적하는 대로, 비합리적 증오, 인종주의, 여성혐오, 호모포비아, 이슬람포비아 등과 같은 현상과 쉽사리 맞물리고 사회적 약자를 쉬운 먹잇감으로 삼는다.²⁹⁾ 이런 환경 속에서 지구적 자본의 이윤 추구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엘리트적 질서에 대항하는 언더독들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변화한 환경은 대항헤게모니의 형성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런 난관을 뚫고 이 공간에서 기존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탈진실 정치와 연계된 비합리적 증오, 인종주의, 여성혐오, 호모포비아, 이슬람포비아를 먹고 자라난 우파 포퓰리즘을 옹호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이렇게 하면 세계가 이럴 것이다’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의 무능력을 증명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³⁰⁾ 우리의 경험이 알려주는 사실은, 포퓰리즘은 결국 우파적 성향으로 귀결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좌파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헤게모니 투쟁 수단이 자신들이 맞서고자 하는 지배적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28) 성영조 & 송승현, “글로벌 혁신기업의 성공전략 - 독점과 플랫폼” 『이슈 & 진단』 258호 (2016. 12)을 보라.

29) Hannan, *ibid*, p. 220.

30)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1)의 13장 “이데올로기와 테러”에서 이데올로기를 언급하는 부분들을 보라.

IV. 을의 민주주의: ‘뭉 없는 이들’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무페는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쓴다. “정치이론가로서, 내가 좌파 포퓰리즘을 이론화하는 방식은 마키아벨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알튀세가 상기시켰듯이 마키아벨리는 ‘국면 너머’(over the conjuncture) 성찰하기보다, 언제나 자신을 ‘국면 안에’ 두었던 사람이다. 마키아벨리의 사례를 따라, 나는 서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우리가 최근 목격하고 있는 ‘포퓰리즘 계기’에 담긴...내 성찰을 어느 한 특정 국면에 기입할 것이다. 나는 내 분석을 서유럽에 한정시킨다.”³¹⁾ 자신이 제시하는 좌파 포퓰리즘이 사실상 서유럽에 한정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 전략을 받아들이는 이라면 이 전략이 우리 맥락에서도 정당하고 유효한지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제VI절에선 무페를 따라, 국면 안에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좌파 포퓰리즘 전략을 숙고해보려 한다. 관련하여 논의의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진태원의 ‘을의 민주주의’를 하나의 예로 삼고자 한다.³²⁾ 이를 예로 삼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제된 사람들을 동원하는 민주주의 전략으로서 언더독들을 동원하는 좌파 포퓰리즘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³³⁾ 둘째,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삼고자 하는 시도 중에서 우리 정치사회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까지 유일하게 우리 맥락을 고려하며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밝혀 둔다면, ‘을의 민주주의’는 토착적 민주주의 모델을

31) Mouffe, *For a Left Populism*, p. 9.

32)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을 보라.

33) 진태원은 “만약 좌파 포퓰리즘 내지 진정한 민주주의적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 포퓰리즘을 우파 내지 극우파와 구별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진태원, 앞의 책, 382쪽.

만들려는 이론적 시도로서 존중 받아 마땅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을의 민주주의’를 예로 활용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우리 정치사회현실을 반영하며 이론화하려는 시도로서 ‘국면 안에서’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비판의 대상은 좌파 포퓰리즘이란 기획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론화된 모델로서 ‘을의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이론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한 차례 더 밝혀둔다.

1. 인터레그넘의 시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주체

‘을의 민주주의.’ 2018년 한 해 동안 이 글을 쓰는 이가 들어본 최고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약자, 피해자, 못 가진 자, 주변화 된 자, 배제된 자”로서 ‘을’을, 진태원은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표현을 빌려 ‘뭉 없는 이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을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모색의 중심에는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제기한 ‘인터레그넘’(interregnum), 소위 시대의 이행기 사이에 빚어지는 공백(국민[민족]국가로부터 지구화 시대로의 이행기 사이에 빚어지는 국가의 공백), 바로 ‘정치적 주체의 공백’이 있다.³⁴⁾ 반면 그람시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무페에게 이런 인터레그넘은 지배적 헤게모니 기획을 중심으로 설정된 몇몇 합의들이 도전받는 기간이다.³⁵⁾ 하지만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 기획이 성립하고자 한다면, ‘변화된 조건을 수반하는 이행기 사이에 공백이 되어버린 공간을 채울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태원 역시 ‘민주주의의 급진화’라는 무페의 문제의식에 동조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⁶⁾

서구 철학에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주체의 탐구가 꾸준

34) Bauman & Bordoni, *State of Crisis* (London: Polity, 2014)의 1장을 참조하라.

35) Mouffe, *ibid*, p. 12.

36) 진태원, 앞의 책, 421-422쪽.

히 이어져왔지만,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합의된 새로운 주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우만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권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체의 가능성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카를로 보르도니와의 대화 중 ‘다중’(multitude)이라는 새로운 정치주체의 가능성에 대해 바우만은,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모든 질서에 대한 불신, ‘질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 ‘유연성’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안정성’과 ‘연속성’이라는 가치보다 위에 놓는 경향, 거꾸집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속부터 녹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현재의 공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며 “항간에 떠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재활용해 사회학적 이론을 급조해내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³⁷⁾

하지만 **리클라우나 무페에겐 명백히 이런 주체들이 존재하는데, 앞서 한차례 언급했듯이 “권력자에 맞서는 언더독들”이다.**³⁸⁾ 랑시에르가 말하는 ‘뭉 없는 자들’이자 대항 헤게모니가 동원해야 될 대상으로서 다원적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대항헤게모니 아래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아직은 조직화되지 않은’(not yet organized) 세력이다. 진태원이 새로운 주체로서 가능성을 탐구하는 ‘을’ 역시 이런 ‘아직은 조직화되지 않은’ 세력이며, 리클라우나 무페의 표현을 빌자면 권력을 가진 자에 맞설 수 있는 ‘언더독들’이다.

억압받는 당사자들이 변화 혹은 혁명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관점은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 이론에서부터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크게 새로울 바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을’이란 존재는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일 때는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인 반면, 자신들이 또 다른 을에 대해 갑으로 변모할 때는 가장 적극적인 억압자처럼 보이기에, 이들을 정치적으로 주체화하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런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37) Bauman & Bordononi, *ibid.* p. 84.

38) Mouffe, *ibid.*, pp. 10-11.

2. 과소주체적인 ‘을’의 존재

진태원이 제시하는, 을의 존재들을 규정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몹 없는 자들’로서의 을이다. 이들은 약자이며, 피해자이고, 가진 것이 없으며, 주변부로 밀려난, 배제된 자들이다. **둘째, 과소주체성이다. 이들은 주체성이 부족하고, 같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동일한 주체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을의 구성원들은 (그런 것이 실제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이질적이며, 다양하고, 때로는 갈등한다. 이 두 가지 특징만 고려해보아도 이런 이들을 규합해 정치적 주체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진태원은 이 문제와 마주함을 피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진태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는 정치적 주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용어 내지 개념이 부재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라는 한계를, ‘민중’은 저항의 주체에 머무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이유로 배제된 자들이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아감벤과 포폴로’, ‘랑시에르와 피플’, ‘라클라우의 포퓰리즘과 피플’을 차례로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를 주체화/탈정체화로 파악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통해 부여된 이런저런 정체성들을 거부하고 그러한 정체성들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주체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³⁹⁾ 하지만 과연 을이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진태원은 ‘을’이란 표현이, ‘을의 민주주의’가 포함하는 몇 가지 쟁점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이 쟁점은 충분히 전체를 인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을이라는 말은 이 사회에는 동료 시민들에게 지배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그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둘째, 갑에 의한 이러한 억압과 주변화, 소외에도 불구하고 을들은 과소주체적 존재자들로 실

39) 진태원, 앞의 책, 80쪽.

존하고 행위한다. 왜냐하면 을들은 동등한 을들이 아니라, 을 아래의 병, 병 아래의 정 등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을은 자신이 갑에게 당하는 것 못지않게 병위에 군림하며, 또 다른 자신의 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의 주체화의 근본 과제가 을의 연대의 문제라는 것, 더 나아가 갑과 을 사이의 구조화된 위계 관계를 어떻게 평등한 민주적 관계로 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⁴⁰⁾

우리가 ‘을의 민주주의’라는 ‘국면 안에서’ 전략을 짜게 될 때, 이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을의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을이 지배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주인이 아닌(따라서 또 다른 하인이나 노예를 전제하지 않는) 주체, 주권자가 아닌(따라서 또 다른 신민, 백성을 전제하지 않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⁴¹⁾

V.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진태원이 던지는 화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을은 비지배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둘째, 을은 범주인가, 주체인가? 셋째, 을은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가?

1. 비지배적인 주체?

결국 을의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정치주체는 ‘비지배적인’ 주체다. 을의 민주주의는 ‘타자에 대한 지배’를 거부하며, ‘주권자’를 거부하는 주

40) 진태원, 앞의 책, 382-383쪽.

41) 진태원, 앞의 책, 383쪽.

체다. 만약 이런 인식이 적합하다면, ‘을’의 실체는 ‘비지배’를 지향하는 당대 공화주의 정체의 시민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게 된다. 당대 공화주의까지 오지 않더라도 한나 아렌트의 행위 개념에서 제시되는 행위자들은 지배적 주권의 개념을 거부하고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 행위한다. 아렌트는 이를 ‘조화롭게 행동한다’(act in concert)라는 표현에 담아 옮기고 있다.⁴²⁾ 이렇게 보면 정치주체로서 을은, 국민, 민중, 인민에 대한 탐구가 그리 중요치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도래할’ 공화주의적 시민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유들로 그런 도래함이 이뤄지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2. 공동체가 없는 주체?

적어도 진태원이 내세우는 ‘을’은(동일하게 라클라우나 무페가 내세우는 권력자에 맞서는 언더독들은) ‘하나의 범주’(category)이지 ‘주체’이지 않다. 정치주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공동체를 갖는다. 지구화 시대의 배제된 자들의 혁명을 논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대부분의 배제된 자들에게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말 자체에는 이미 그들에게는 속할 곳이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착한 빈민은 어떤 빈민인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빈민이다.’ 기본적으로 뭉이 없는 자들이 사회에 인정받는 최선의 길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바우만의 설명처럼, 우리에게 도덕적 부담을 안기는 가시적 시선 밖으로 추방되어야 할, 불편한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호소할 공동체가 없다.⁴³⁾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

42)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p. 244-245.

43) Zygmund Bauman, *Collateral Damage: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 Age* (London: Polity, 2011), 10장을 보라.

산다고? 그곳을 우리는 빈민촌이라 부른다.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들을 ‘정치주체화’하려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이들이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드는 일이 아닐까?

여기에 더하여 각각의 다른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이,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대항 헤게모니의 동원에 합류할 일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동원의 경험이 쌓일수록 각기 다른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은 동원의 현장에서 또 다른 배제를 경험하며 더 이상 자신들이 그 동원의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된다. 2016년 촛불 집회 이후의 동원에서 성소수자들이 겪었던 배제의 경험이 그 예라할 수 있다.⁴⁴⁾ 이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이 동원의 과정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며 배제되지 않도록 주체화하는 길은 ‘정치정당’을 통해 동원되면서 대표되는 경험을 쌓아주는 것이지만(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무폐가 말하는 동원의 방식이다), 그런 경험은 유럽과 같이 다당제나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선거구제로 인한 사실상의 양당제, 지역대표가 지배적인 제도 아래에서 정당을 통한 동원이 다양한 요구와 접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동원의 순간일수록 도전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야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적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순위가 결정되는 순간 다원적 대표는 불가능해진다. 덧붙여 이런 정당을 통한 동원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파 포퓰리즘을 한 차례 더 상기고자 한다.

3. 후견적 민주주의로의 전략?

그런데 ‘을의 민주주의’의 논리를 따라 가다보면, 더불어 무폐가 말

44) “김철촛불과 광화문집회, 나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2019. 10. 08).

하는 정치정당을 통한 언더독들의 동원 현상을 따라 가다보면, 이런 모델과 전략이 일종의 후견적 민주주의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을’들이 내부에 이질성과 다양성, 갈등성이라는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주체화는 과정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⁴⁶⁾ 그럴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것은 일종의 지적 기만이다. 이런 점에서 진태원은 매우 정직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선 을의 민주주의가 매우 아포리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을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가 매우 아포리아적이라는 점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포리아는 이러한 돌파의 노력이 아무런 성공의 보장이 없는 모험적인 기획이라는 점이 중요”하다.⁴⁷⁾

하지만 이런 언급 역시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잠재적 주체가 주체화될 수 있는 조건을 결여한 사항에서, 아포리아적인 돌파의 노력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 아포리아적인 돌파의 노력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을인가? 민주주의는 내부의 이질성, 다양성, 갈등성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를 요구한다. 그런데 을들에게는 함께 속할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을들에게는 주체화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가 없는 자들이 저항에 나설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정치주체화의 핵심인 정체의 구성능력이 있을 리는 없다. 여기에서 앞의 V-2절에서 보았듯이 정당의 역할이 필요해지지만, 우리의 선거제도와 대표제도는 다원적 행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맥락을 직시해야 한다.

45) 진태원, 앞의 책, 427쪽.

46) 진태원, 앞의 책, 444쪽.

47) 진태원, 앞의 책, 445쪽.

VI. 나가는 말. 왜 민주주의 대신 ‘좌파 포퓰리즘’이어야 하는가

‘다원주의의 사실 그 자체’란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삼는 무폐의 ‘좌파’ 포퓰리즘 이론은 (진태원의 을의 민주주의 역시도) 내부의 비지배, 관계의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롤스의 용어를 빌어 와) 무폐가 강조하는 ‘다원주의의 사실 그 자체’란 사회적 조건은 대개의 경우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자기신념으로 가득 찬, 사실상 근본적으로 공공의 장에서 공유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⁴⁸⁾ 아렌트의 말처럼 공유할 것이 없는 자들의 본질은 ‘무세계적’이다. 공유된 세계에서 배제된 자들로서 을의 본질은 ‘외로움’(loneliness)이다.⁴⁹⁾ 외로운 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에게 속할 공간을 줄 수 있는 정치지도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 대목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벽을 지운 라클라우 역시 인정하는 대목이다. ‘소외된 자들을 모아낼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현실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그 지도자가 ‘샌더스’인지, ‘트럼프’인지 모를 일이라는 데 있다. 더하여 무세계적인 사람들에게 그가 ‘샌더스’인지 ‘트럼프’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에서 그들의 선택이 ‘트럼프’였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좌·우의 경계는 무의미하다. 설령 이들이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균열을 메우는 이들은 새로운 반동적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⁵⁰⁾

48) Arendt, *The Human Condition*, pp. 51-53을 보라. 아렌트는 공적영역(public realm)을 공유하는 세계(the common world)라고 표현하며 사적인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 규정한다.

49)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의 결말에서 무세계적인 자들의 ‘외로움’(loneliness)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외로움은 사유(thinking)에 필수적 요건으로서 ‘고독’(solitude)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50) 그 예로서 Steven Levitsky &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를 보라.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당대 대부분의 민주정체가 독재의 경계를 넘지 않아 오히려 그 신호를 선명하게 볼 수 없는, ‘선

마찬가지로 무세계적인 이들에게 내부의 비지배, 관계의 평등성이 관심사일 확률은 높지 않다. 헤게모니를 동원하는 수단, 전통적 미디어와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모두가 독점 자본에 장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지배적인, 관계의 평등성이 중심이 되는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일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우리사회를 보더라도 이들은 공정성의 기준으로 ‘메리트크라시’란 능력주의를 내세워 주된 헤게모니를 만들고 있고,⁵¹⁾ 갑·을·병·정이란 지배적 감성이 사회전반을 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뭇 없는 자들의 정치주체화는 그야말로 아포리아에 불과할 것이다. **이 점에선 인터레그넘에 대한 바우만의 생각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본다.** 바우만의 지적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력을 존재한다고 말할 필요도, 소용도 없는 것이다.

침체된 좌파들이, 스스로의 탈출구를 찾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탈출구가 포퓰리즘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포퓰리즘이 가정하는 정치적 주체엔 자기해방의 원동력이 없다. 정당정치가 다원적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해방은 정치지도자의 입에, 유언 속에 열린다. 우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포퓰리즘의 열기 속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 의 맞대결을 통해 유언의 정치(박정희 대 노무현)를 경험한 바 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우리의 ‘국면 안에서’ 볼 때 ‘좌파 포퓰리즘’은 우리에게 그다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더하여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포퓰리즘 운동에서 포데모스만이 예외적으로 좌파모델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을 뿐이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수많은 사례를 외면하고 예외적 사례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론적 문제와 현실적 난관 앞에서도 만약 누군가 좌파 포퓰리

동가적인’ 선출된 지도자들의 손에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51) 정태석, 장은주, 김만권 외 3명,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시민과 세계』 통권 32호, (2018): 137-160을 참고하라.

즘 기획을 계속 주장하고 싶다면, 그 이전에 먼저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민주주의자들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축적된 규범이 정립된 민주주의를 버리고 혐오와 차별, 증오와 원한의 정치적 유입이란 위험을 감수하며 포퓰리즘을 정상적인 정치과정으로 포섭하려 하는 것일까?” “분열된 다양한 세력들의 결속을 민주적 규범이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 아래 모색하는 일이 민주적 가치와 상응할 수 있을까?” “좌파 포퓰리즘이 요구하는 권력자와 언터독의 헤게모니 투쟁이 기존의 자유적 제도 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왜 이를 굳이 민주주의란 이름 대신 좌파 포퓰리즘이란 용어로 대체해야만 하는 것일까?” “혹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좌파 포퓰리즘이란 ‘기존의 체제를 반드시 전복시켜야만 한다’는 완고한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조급한 정치적 기획은 아닌 것일까?”

■ 참고문헌

- Althusser, Louis. *Machiavelli and US*. London: Verso, 1999.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1.
- _____. *The Human condi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Bauman, Zygmund & Bordon, Carlos. *State of Crisis*. London: Polity, 2014.
- Bauman, Zygmund, *Collateral Damage: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 Age*. London: Polity, 2011.
- Brown, Wendy. “Wounded Attachments,” *Political Theory*. Vol. 21, No. 3, August 1993.
- Canovan, Margaret. *The People*. London: Polity, 2005.
- Judis, John B. Populist Explosion. *How the Great Recession Transformed American and Europe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Global Reports.
- _____. “Rethinking Populism,” *Dissent* (Fall, 2016) (<https://www.dissentmagazine.org/article/rethinking-populism-laclau-mouffe-podemos>)
- Kalyvas, Andreas.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the Extraordin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Laclau, Ernesto.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2005.
- Laclau, Ernesto & Mouffe, Chantal.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2001.
- Antonio Gramsci, *Selection from Prison Notebooks*, ed. & trans by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 Smith.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 Hannan, Jason. “Trolling ourselves to death? Social media and post-truth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s*. Vol. 33(2), 2018.

- Levitsky, Steven & Ziblatt, Daniel. *How Democracies Di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 Mouffe, Chantal.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2018.
- _____. *On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2005.
- _____.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1993.
- _____.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2000.
- Phillips, Tom & Phillips, Dom. “The new Venezuela? Brazil populist Bolsonaro’s scare tactic gains traction,” in *Guardian* (2018. 10. 11).
- Prentoulis, Marina. *Left Populism in Europe: Syriza, Podemos and Beyond*. London: Pluto Press, 2020.
- Ramiro, Luis & Gomez, Raul. “Radical-Left Populism during the Great Recession: Podemos and Its Competition with the Established Radical Left.” *Political Studies*. Vol. 65(1S), 2017.
-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P, 1993.
- Schmitt, Carl. *The Leviathan in the State Theory of Thomas Hobbes: Meaning and Failure of a Political Symb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Vatter, Miguel. “The Quarrel between Populism and Republicanism: Machiavelli and the Antinomies of Plebeian Politics,”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11. No.3, 2012.
- Wolin, Sheldon, S. “Fugitive Democracy,” *Constellation*. Vol. 1. No. 1. 1994.
- Žižek, Slavoj “Against the Populist Temptation,” in *Critical Inquiry*. Vol.32. No.3, Spring 2006.

강병익. “2017-2018년 4월 유럽연합 국가별 총선결과: 우파강세 및 포퓰리즘 확산, 그리고 유럽연합의 미래”, 민주연구원, 2018. 4월.
금 민. 「포데모스,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4호, 2015.

김주호. 「포퓰리즘 부상 배경으로서 민주주의의 응답성 결여: 2010년대 독일을 사례로」, 『현상과 인식』. 2018

_____.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시민과 세계』 35호, 2019.

상탈 무폐. 이승원 역.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서울: 문학세계사, 2019.

상탈 무폐, 히로세 준. 「포데모스 혹은 좌파포퓰리즘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진보평론』 68호, 2016.

성영조 & 송승현. “글로벌 혁신기업의 성공전략 - 독점과 플랫폼” 『이슈 & 진단』 258호, 2016. 12.

이관후. 「통치 주체의 자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질문은 무엇인가?」. 『시민과 세계』 통권 35호, 2019.

이승원.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시민과 세계』 통권 32호, 2018.

장석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시민과 세계』 통권 34호, 2019.

_____. 「좌파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진보정치모델」. 비판사회학대회, 2018.

정태석, 장은주, 김만권 외 3명.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시민과 세계』 통권 32호, 2018.

_____. 『을의 민주주의』, 서울: 그린비, 2018.

_____. 「포퓰리즘, 민주주의, 민중」, 『역사비평』 통권 105호, 2013.

_____. 「을들의 연대에 대하여」, 『황해문화』 통권 106호, 2020.

진태원 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서울: 소명출판, 2018.

홍철기. 「포퓰리즘-반포퓰리즘 논쟁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포퓰리즘은 정말로 반-현정주의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가?」, 『시민과 세계』 통권 34호, 2019.

❖ ABSTRACT

Against ‘Left Populism’:
Democracy Without ‘the Common World’?

Kim, Man Kwon
Kyung Hee University

Witnessing the populist explosion all over the world,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review the idea of radicalizing democratic movements under the banner of ‘left populism’ urged by Chantal Mouffe and her followers. In considering this political strategy, this paper takes the following question seriously: Can populism be bound by democratic norm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develops a fourfold discussion; first, it critically delves into the theories of left populism, especially constructed by Mouffe and Ernesto Laclau; second, it checks the reality of populist movements all over the world: the dominance of (far) right wing populism; third, it takes into account the efficacy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is strategy in the Korean context; and finally, it argues that the left populist strategy could degenerate into a politics of fragmentation paralyzing not only democratic norms but also democracies themselves.

Key Words : populist movement, left populism, right wing populism,
Chantal Mouffe, populism in Korea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